

한승주 前외무장관 작통권 이양으로 미국이 얻는 7가지



- ① 더욱 자유로운 전략적 유연성 행사
- ②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기회
- ③ 北 공격 '인계철선' 역할 부담 해소
- ④ 對韓 무기 판매 확대
- ⑤ 남한내 반미정서 촉발 요인 제거
- ⑥ 남한 군사적 지지 위한 협상력 강화
- ⑦ 중동 등 다른 안보현안에 주력

참여정부 초대 주미 대사를 지낸 한승주(사진) 전 외무장관은 21일 시내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 선진화 포럼 주최 강연회에서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미동맹'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하면서 이런 화두를 던졌다.

한 전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 이양 제의에 접하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기를 3년이나 당겨 2009년까지 이양을 끝내자고 역제의를 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싫다'는 데 마치 강요해서 자주권을 박탈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냉전시기의 한미동맹은 대소련 봉쇄 및 일본 방어를

위한 전진기지로써 중요했으나 지금은 남한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은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전작권을 반환할 경우 ▲더욱 자유로운 전략적 유연성을 행사할 수 있고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기회를 가지며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이 불필요해진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對)한국 방위를 위한 국방비 지출을 축소할 수 있으며 ▲안보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대한 무기 판매가 증가하고 ▲남한내 반미정서 촉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며 ▲남한의 군사적 지지를 얻기 위한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

력을 강화할 수 있고 ▲중동 등 다른 안보현안에 주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러바 전작권 이양으로 미국이 얻는 7가지를 나열한 한 전 장관은 이어 "미국의 안보공약과 안보협력은 전작권을 공유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예컨대 전작권을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안보협력이 잘 되는 나라들도 여럿 있다"며 일본과 호주,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등을 예로 들었다.

한 전 장관은 미국이 이런 나라들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 이유가 "전략적 이해관계와 전반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종석 통일부 장관 “北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우리銀 계좌개설 정당”



이종석 통일부 장관(사진)은 21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내 계좌 개설과 관련, "당시 통일부가 취한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관리위원회와 기업은 법률적, 형식적 측면에서는 북측(기관이며 기업)이지만 우리쪽 사람들이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어서 계좌를 당연히 설치해 준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리위원회의 계좌가 개설된) 지난 연초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일 반화되기 이전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 송금 과정에서 외 국환거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온 사안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초기에 (외국환거래 규정)를 간과했지만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방코 텔타 아시아(BDA) 조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

문에는 "그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 "그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미사일 발사 이후 갈등 심화 양상을 보인 북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통일부도 상황 호전을 위해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북핵 해결 다시 중재”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한명숙 총리 만나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20일 저녁(한국시간 21일 새벽)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중재의 노력을 시도해보겠다”고 밝혔다.

카다피 원수는 이날 트리폴리 시내 지도자궁에서 리비아를 공식방문 중인 한명숙 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그동안 중재의 노력을 시도했고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카다피 원수는 그러나 “우리가 핵을 포기한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데, 국제사회의 지원 및 보상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카다피 원수는 한 총리가 “리비아의

WMD(대량살상무기) 포기 및 개혁, 개방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북한이 북핵 포기 및 평화적 해결을 통해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04년 2차례에 걸쳐 북한에 특사를 파견,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한데 이어 같은 해 주한리비아 대사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와 주한미군철수안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남북한에 서류 등으로 전달했던 과거의 중재노력을 한 총리에게 소개했다.

그는 또 지난해초 방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면담 때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체제보장 및 자원 지원을 약속받은 ‘리비아식 해법’을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북한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리비아를 방문중인 한명숙 총리가 21일 오전(한국시간) 트리폴리 시내 비를 아지리아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를 예방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외없는 ‘카다피식 스타일’

리비아를 방문중인 한명숙 총리의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예방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행사 직전에 서야 통보되는 등 ‘카다피식 외교’ 스타일이 어김없이 적용됐다. 그동안 다른 국가 고위 지도자들의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예방 예정일인 20일 오전(현지시간) 까지만 해도 시간과 장소 등은 오리무중이었다.

면담 장소도 당초 실무선에서 거론됐던 막사가 아닌 지도자 관저인 바브 아지자이로 결정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속소인 엘 마하리 호텔에서 출발한 한 총리와 수행원 및 취재진의 차량행렬

이 오후 7시 30분경 바브 아지자이에 도착했을 당시, 주변 곳곳에는 무장군인과 탱크, 장갑차가 눈에 띄는 등 삼엄한 경호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카다피 원수는 1시간 가량 이어진 면담 내내 한 총리에게 호의를 보이며 마찬가지로 예방 예정일이었던 이전 수순과는 다른 ‘카다피 스타일’을 그대로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유전 파이프 건설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한 총리에게 지도까지 내보이며 열심히 설명했다. 자신은 자리에 앉아 있고 옆에 있던 한 총리가 일어서 카다피 원수 쪽으로 고개를 숙여 설명을 듣는 구도가 연출됐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비리대책 자신 있다면



최재호
체육부 차장

최근 광주 교육계를 들쭉날쭉 한 신설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사건은 행정실장 2명이 구속되고 해당 학교 교장은 영장이 기각되는 선에서 표면적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신설학교 납품비리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잠잠하던 전남도교육청으로까지 파문이 번지고 있는 느낌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 관내에서 작년과 올해 신설된 14개 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납품 비리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됐지만 도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14개 학교에 각각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놓았다. 특별감사까지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시교육청의 기자재 납품 비리사건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감시할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미처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학교장과 행정실장 주도로 기자재 구입이 이뤄진 시교육청만의 제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전남도교육청의 제도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개교 전년도까지는 지역교육장과 경리계장이 개교업무를 관리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2월말까지 지역교육장과 개설사무처급공무원이 따로 지정해 관리한 뒤 개교 이후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권한이 넘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개교전까지 지역교육청 교재교구선정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자재 납품 비리가 빚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지역교육장과 경리계장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있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인지만 제도만 맹신하는 도교육청의 태도가 너무 느슨하다.

특히 도교육청 주장대로 제도가 좋아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사를 수용해 ‘비리 없음’을 떳떳이 밝혀야 한다. ‘클린 행정’에 자신 있다면 특별감사를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

도교육청의 감사실 관계자가 “사법권이 없는 감사팀이 어떻게 리베이트 수수나 납품비리를 밝혀낼 수 있겠나”는 표현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감사실은 책상에 앉아있다가 누군가 완벽하게 정리해 가져다준 불법사실이나 비리만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감사팀이 살아 있어야 ‘클린행정’이라는 전남도교육청의 위상은 지켜진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의 특별감사 요구를 받아들여 그들에게 ‘비리 없음’을 보여줄길 기대한다.

/lion@kwangju.co.kr

LG JILLIN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량입하

MAESTRO, DAKS, TOMMY HILF, TNGT, 20 ANELLO, lafuma, DAKS GOLF

상설할인마트 서당점
110000511-0249

DSLR 카메라의 진화

오래 사용 가능한 렌즈와
전용 플래시

세계적 스포츠 선수
가장 강력한 촬영기술을 만나
이제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α

계통구입 및 문의: 02-522-3000
포니광주점: 062-522-3000
포니광주점: 062-522-3000